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025. 9. 15.~2026. 6. 30.)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 개요** 3

□2 **조사 실시 경과** 5

1. 조사 일정 5

2. 서류 제출 6

3. 증인 출석 8

□3 **주요 조사실시 내용** 9

□4 **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 10

1. 총괄 사항 10

2.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 11

□5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처리** 22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 과 보 고 서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고양시 내 식사동, 문봉동을 비롯하여 다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민 숙의 또는 공론화 과정 없이 전례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졸속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전반의 과정에서 시 행정을 비롯한 도시계획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2. 조사기간: 2025. 9. 15.~2026. 6. 30.

3. 조사범위

○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고양시 행정과 관련한 사항

○ 그밖에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

4. 조사방법: 서류 조사 등

5. 조사위원회

가.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나. 조사위원: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구 분	소속상임위원회	위 원 명	비고(교섭단체)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임 홍 열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김 학 영	
조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권 용 재	
	건설교통위원회	김 해 련	
		최 규 진	
	문화복지위원회	김 미 수	
		송 규 근	

6. 조사 대상 기관 등

○ **고양시**

7. 조사(사무) 보조: 7명

○ 조사총괄: 전문위원 지방시설주사 송석민

○ 조사일반: 지방행정서기 차주영, 지방행정서기 지정환
지방행정주사보 김승현

○ 지방속기주사 장선순 (속기)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강현승, 서정민 (방송, 사진)

2 조사 실시 경과

1.조사일정

일 시	차 수	감 사 내 용	출석 대상	장 소
'25. 9. 15.(월)		□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	-	본회의장
'25. 9. 15.(월)	위원회 1차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5. 10. 13.(월)	위원회 2차	1. 업무보고의 건 2. 조사계획서 작성 건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 4. 세부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5. 10. 21.(화)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	-	본회의장
'25. 11. 5.(수)	사무조사 1일차	□ 데이터센터의 미미한 고양시 세수 기여도 및 행정 절차 부적절성 지적	증 인	위원회 회의실
'26. 3. 6.(금)	위원회 3차	1. 세부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6. 3. 20.(금)	사무조사 2일차	□ 참고인 진술 통한 주민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 상황 확인 □ 집행부의 행정적 특혜 의혹 제기	증 인 참고인	위원회 회의실
'26. 6. 16.(화)	위원회 4차	1.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 서류제출

연번	요 목	제 출 내 용
1	도시계획 정책관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현황
2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관련 협의 등
3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내역
4		택지개발사업 등 당초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5		도시계획위원회 임홍열 위원 해촉 행정절차 서류 일체
6		데이터센터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 등
7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계획
8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 등
9		제2부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임명 자료
10	건축정책과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총괄 현황
11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관련 협의 등
12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 내역
13		민원해결을 위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
14		데이터센터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 등
15		공사 중 데이터센터 현황 (공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관련 민원)
16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 활용 내역 및 향후 이용계획
17		소통협치담당관과 민원 검토 여부 및 그 내역
18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예정) 용량 및 전력 공급 협의 현황
19		건축인허가 관련 협의 회신 현황(한국전력공사)
20		건축대지 내 국유지 소유권 인정 관련 법령
21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연번	요 목	제 출 내 용
22	도로정책과	문봉동 데이터센터 시설개요 및 위치도
23		계획도, 현재 진행단계 및 향후계획
24		편입토지 현황
25	신도시정비과	2010년 이후 고양시에 방송통신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된 개발사업지구 목록
26	도시개발과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관련 협의 등
27		데이터센터 허가 관련 민원
28		개발사업 지구 내 데이터센터 당초 건립계획, 변경 사유 등
29		2010년 이후 고양시에 방송통신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된 개발사업지구 목록
30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서 방송통신시설 관련 계획
31		관내 데이터센터 진입도로 개설 추진 현황
32		데이터센터별 전력 사용(예정) 용량 및 전력 공급 협의 현황
33		데이터센터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34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현황
35		방송시설용지 허용용도 변경(데이터센터 제외) 현황
36		방송영상밸리 조성토지 공급 계획 승인 현황
3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정정
38	도로관리과	2022년 덕이동 데이터센터 심의회자료
39		2023년 덕이동 데이터센터 심의회자료
40		2025년 덕이동 데이터센터 심의회자료
41	도시디자인 담당관	데이터센터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결과
42	세정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세수 기여도 및 재정효과
43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개소별 고용 현황

연번	요 목	제 출 내 용
44	덕양구 안전건설과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내용
45		데이터센터 건립관련 주변 가스 및 상수도관 관련 사항
46		각 데이터센터 굴착 중, 굴착 완료까지 위치도 및 굴착 표준 단면도
4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내용
48		데이터센터 건립관련 주변 가스 및 상수도관 관련 사항
49		각 데이터센터 굴착 중, 굴착 완료까지 위치도 및 굴착 표준 단면도
50		관로 기매설 위치도(식사데이터센터)
5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내용
52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 송전선로 매설 깊이
53		가스 및 상수도관 관련 사항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증인 16명, 참고인 4명 출석

가. 제1차 행정사무조사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공무원	〈증 인〉		12명	
1	도시주택정책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출석
2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출석
3		주택과장	이성실	출석
4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출석
5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출석
6	도시혁신국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출석
7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출석
8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출석
9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장	강복선	출석
10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출석
11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출석
12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출석

나. 제2차 행정사무조사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공무원	〈증 인〉		8명	
1	도시주택정책실	도 시 주 택 정 책 실 장	서윤하	출석
2	교 통 국	도 로 정 책 과 장	정일형	출석
3	도 시 혁 신 국	도 시 혁 신 국 장	박문희	출석
4		도 시 개 발 과 장	이양금	출석
5	일 자 리 재 정 국	세 정 과 장	강복선	출석
6	기 후 환 경 국	기 후 에 너 지 과 장	배경효	출석
7	상하수도사업소	수 도 시 설 과 장	윤광옥	출석
8	일 산 동 구 청	안 전 건 설 과 장	정달용	출석
일반인	〈참 고 인〉		4명	
1	식사동 데이터센터 비대위 대표		강순모	출석
2	식사동2단지 입대위 회장		김용호	출석
3	문봉동 요양타운 대표		김은희	출석
4	순복음영산교회 장로		문기봉	출석

3 주요 조사실시 내용

○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실익 및 지역 기여도 검증

○ 주민 생존권 침해 실태 및 안전 대책의 적정성 점검

○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과정의 행정적 특혜 및 절차적 위법성 규명

4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1. 조사총괄

가. 조사의 목적 및 배경

○ 고양시 다수 지역(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민숙의 또는 공론화 과정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졸속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하는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전반에 걸친 집행부의 행정 추진 과정과 도시계획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의 문제점과 그밖에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나. 종합 결론

○ 본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상습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의 책임 회피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절차적 특혜 제공 등 심각한 행정의 불공정성이 확인됨.

○ 특히 154kV 특고압선 매설 등 시민의 생명권 및 환경권과 직결된 안전 검증을 소홀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 숙의 과정

없이 인허가를 강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킴.

○ 이에 본 위원회는 졸속 추진된 데이터센터 건립 전반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과 실질적인 민관 상생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2.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

가. 주요 지적사항

(1) 핵심 증인의 상습적 불출석 및 불성실한 조사 태도에 관한 사항

○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정화 제2부시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행정사무조사 시마다 행사 참석 및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며 답변을 회피함.

○ 또한 건축정책과장 등 주요 실무 과장들이 '개인 일정'이라는 네 글자만을 명시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해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행위임.

○ 이러한 불출석 행태는 과거 킨텍스 및 백석동 행정사무조사 때부터 관례화된 고의적 회피로 판단되며,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재 속에서 대리 출석한 공무원들이 답변을 엇박자로 내놓는 등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킴.

(2) 행정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와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에 관한 사항

○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도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시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동의율 허들을 기존 80%에서 0%로 아예 없애주는 등의 이례적인 행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됨.

○ 또한 지난 10년 넘게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던 도시계획심의 제안 설명을 문봉동·식사동 데이터센터 심의 시점부터 갑자기 공무원이 대신하도록 변경한 것은 관이 특정 사업을 주도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주었으며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를 낳음.

○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선투자 리스크가 있는 도로굴착 허가를 사전에 처리해 준 것 또한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편파 행정의 결과로 보임.

(3) 시민 안전 위협 및 환경권 보호 대책 미비에 관한 사항

○ 154kV 특고압선이 주거지 및 학교 인근 도로 지하 1~3.6m 내외의 매우 얕은 깊이로 매설되도록 설계되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한전의 기준만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안전 검증을 소홀히 하였음.

○ 데이터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냉각팬의 저주파 소음(야간 40dB 이상 예상)과 열기 배출이 인접 아파트 및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며, 이는 시민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임.

○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UPS)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타운과 인접해 있음에도 화재 확산 시뮬레이션이나 구체적인 방재 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점은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줌.

○ 데이터센터 비상발전용 창고의 유류 저장량은 일반 주유소의

2~3배 규모로 이는 인근 지역의 화재 및 폭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하 40m 이상의 심층 굴착은 토사 유출 및 지반 침하 등 대형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큼.

(4) 경제적 실효성 부재 및 지역 상생 방안의 형식화에 관한 사항

○ 2022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7개의 데이터센터가 모두 운영될 경우 필요한 전력량은 총 487MW에 달함. 이처럼 막대한 전력이 고용 창출 효과가 극히 미미한 데이터센터에 집중됨으로써, 고양시의 전반적인 전력 수급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됨.

○ 결과적으로 정작 고양시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핵심 산업 시설이나 우수 기업 유치가 전력 부족 문제로 원천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함.

○ 한전의 전력 확보 여부는 인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전제 조건일 뿐이며, 최종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고양시가 가진 고유 권한이자 책무임.

○ 고양시는 한전과 사업자의 사적 계약 관계를 핑계 삼아 시 전체의 중장기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의무를 완전히 태만하고 있는 상황임.

○ 사업자의 전력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고양시의 미래 자족시설 유치 여력을 갉아먹는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에 대해 시가 행정 주권을 행사하여 인허가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통찰과 고민이 전무했던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

○ 또한 최근 세워진 데이터센터 3개소의 연간 세수는 고양시

전체 지방세의 0.11%인 7.7억 원에 불과하며, 막대한 전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고용 효과는 극히 미미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가 현격히 낮음.

○ 조사 과정에서 약 1,500명이 상주하는 요양타운과 3,000명의 신도가 있는 교회 등 기존 지역 자산의 생존권 및 재산권 피해를 묵인한 채 인허가를 강행하였다는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음.

○ 특히 사업자가 실질적인 피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대위의 위임을 받은 비상대책회의 등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회피한 채, 특정 개인이나 자연부락 노인회 등을 접촉하여 소규모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민원을 개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확인됨. 더욱이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님에도, 대곡행 셔틀버스 지원 등 지엽적인 대안을 내세워 마치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기만하며 협의 완료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 특히, 대곡행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것은 버스정책과에서도 부인한 사실을 도시계획심의자료에 합의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행사의 이러한 행태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 확보로 편리하게 해석하여 건축허가 의견을 준 것은 또한 명백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음.

(5)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부지 관리에 따른 주민 갈등 야기에 관한 사항

○ 당초 고양시는 방송영상밸리 내 방송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가 입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해당 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삭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음을 확인함.

○ 이는 데이터센터를 일산테크노밸리 등 특정 구역에 집적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한 부지를 놔둔 채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산발적으로 입지하게 만들어 특정 부동산 개발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 및 대의기관 무력화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부시장을 정식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처럼 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이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할 소지가 다분함.

○ 제4회 위원회의 경우 부시장의 결재 없이 실무선에서 임의로 개최 날짜를 변경(5.28. → 5.27.)하였고, 제6회 위원회는 안건이 많지 않음에도 정기회의를 취소한 뒤 타 부서 공지도 없이 수시회의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7.30. → 7.16.) 개최하는 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함.

○ 특히 제5회 위원회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재심의 건을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 요청과 개최 계획 보고가 동일한

날(6.24.)에 이루어지고 바로 다음 날(6.25.) 심의가 열리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졸속 행정이자 특정 사업자를 위한 노골적인 일정 단축으로 판단됨.

○ 또한, 가이드라인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을 배부해야 하나,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1~3일 전에 기습적으로 안건을 배포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공식 승인 없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를 야기함.

○ 더욱 심각한 것은, 데이터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수용성을 요구하던 임홍열 의원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필수 절차(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해촉을 강행했다는 점임.

○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자가 내세우는 장밋빛 조치계획만 맹신하여 안건을 무사통과시키면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 대표의 의견은 묵살하다 못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작금의 현실은 고양시 행정의 심각한 퇴행과 특혜성 유착 의혹을 뒷받침함.

○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주민 안전 및 환경권 보호 대책이 실제 인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는 의원의 위원회 참여와 주민 숙의 과정을 단순한 인허가를 위한 면피용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대의기관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임.

나. 처리 요구 및 조치 사항

본 특별위원회는 상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도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불투명성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근절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함.

또한, 주민의 안전과 환경권, 재산권을 도외시한 채 강행된 편파 행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무너진 고양시 도시계획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요구함.

(1) 핵심 증인의 출석 거부 및 불성실한 조사 태도에 대한 엄정 조치 시행

- ○ 향후 시의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들은 시의회의 엄중한 조사 권한을 존중하여 핵심 증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 아울러 개인 일정이나 병가 등 불분명한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증인 출석 관련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증인들의 출석 거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향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의회의 과태료 부과 요구가 있을 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조사 권한으로 면밀히 조사 후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라며,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백석동 업무빌딩 행정사무조사 시 불출석한 사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2)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 규명 및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

- ○ 민간사업의 조건부 이행 사항을 시가 대신 처리해 주는 이례

적인 행정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동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안 설명 주체를 다시 민간사업자로 환원하여 관의 주도적 개입을 차단하고, 모든 심의 안건의 자료 배포 및 일정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 또한 건축허가 이전의 선행적 도로점용, 도로굴착 허가 남발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리스크를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 보증금 납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3) 시민 안전·환경권 담보를 위한 기술적 안전 기준 강화

- ○ 154kV 특고압선 매설 시 단순히 법적 최소 기준(1m)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폐시설이 없는 경우 5m 이상으로 대폭 심화하거나, 심화가 어려운 구간에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금속제 차폐판 설치를 허가 조건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함.
- ○ 시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열섬 현상, 전자파가 인접 아파트 및 요양타운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안전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 소음 저감을 위해 액침 냉각 방식 등 최신 기술 채택을 사업자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해야 함.
- ○ 대규모 유류 저장시설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연쇄 폭발 및 유독가스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특히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가 많은 요양타운 등 인근 취약 시설을 타깃으로 한 정밀한 화재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고도화된 방재 매뉴얼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심층 굴착 공사 시 정밀 지반 점검을 시행해야 하고,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맥 변화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가능성을 착공 전후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덕양구 오금동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암반 굴착에 따른 인근 건축물의 균열·진동 피해와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특히 해당 사안의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주무 감독부서의 지도·감독 소홀이나 직무태만이 있었는지 엄중히 조사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4)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 방안 도출 및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 유도

○ 한정된 자원인 전력 사용량 대비 세수 수입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구체적인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이끌어내야 함.

○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전력 독점으로 인해 고양시 내 신규 산업시설 및 우수 기업 유치가 무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시 차원의 '중장기 전력 수급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산업용 전력 할당량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가 아닌 비대위, 입대위 등 실질적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상생 협의체를 시가 직접 중재하여 운영해야 함.

○ 또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용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분쟁 조정 절차를 즉시 개시할 것을 요구함.

(5) 도시계획 원칙 회복 및 주거 밀집 지역 내 데이터센터 산발적 입지 방지 대책 수립

○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집적화가 가능한 특정 지구 내 데이터센터 입지 계획을 임의로 해제·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산발적으로 확산되게 만든 도시계획 행정의 경위를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요구함.

○ 집행부는 관내 데이터센터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발적 입지를 차단하고 행정적 통제력을 전면 회복하기 위하여, 단순 권고 수준의 지침을 탈피한 실효적 가이드라인을 즉시 제정해야 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거시적 전력 수급 여건의 취약성과 시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 침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심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상의 특정 용도 제한, 의무적 이격거리 규정, 부지 지정 요건 등 강력한 법적 규제 형식을 가이드라인에 전면 접목하여 위원회 심의나 인·허가 시 구속력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행정 편의적인 부지 관리로 인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도시계획 변경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함.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의 실질적 반영 및 대의기관 견제 기능 회복

○ 감사부서에서는 정식 임명 절차를 누락한 채 위촉된 제2부시장의 도시계획위원장 자격 및 해당 체제하에서 의결된 데이터센터 인허가 심의 결과의 법적 효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조치를 요구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배부 기한(개최 7일 전)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원장 결재 없는 임의적인 회의 일정 변경이나 상정 요청 당일 계획 결재 등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급조되는 비정상적인 회의 운영 행태를 즉각 근절할 것을 요구하며 이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 바람.

○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된 임홍열 의원에 대한 부당한 해촉 처분을 즉각 철회 및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위원회 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과 반대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함.

○ 집행부가 형식적인 조치 계획만으로 심의 우려 사항을 갈음하고 인허가를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대효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집행부가 형식적인 조치 계획만으로 심의를 강행하는 요식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대의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

5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처리

1. 지적사항 조치

○ 근본적인 세부 종합대책 강구
○ 행정 절차의 투명성 회복 및 특정 사업자 특혜 방지 대책 강구
○ 시민 안전 중심의 기준 강화 및 실질적 상생 협의체 운영 촉구
○ 위 내용들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엄중한 감사를 요청함

※ 60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 청구 등 별도로 조치할 계획임.

2.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의결서(결과보고서) 이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
(증빙서 첨부)
○ 시정 및 개선사항 완벽처리: 허위보고 및 부실보고 지양
○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관리 번호	조치 구분	제목 및 지적사항	처 리 내 용	완결 여부
총괄 1 . .				
지적 1-1				
. . .				
지적 10-4				
조치 사항				